



프랑스 총선과
파시즘의 위험

2~6, 8~10면

삼성전자노조
파업 선언

16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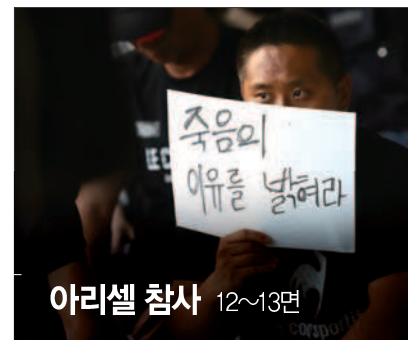
7면

윤석열 탄핵 청원
100만 명 돌파

14, 15면

의대 증원
국회 청문회

11면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파시스트 승리

선거와 거리 모두에서 파시즘을 패퇴시켜야 한다

관련 기사 2~6면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 결과에 대응해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또, 투표 결과는 위기 시기에 어떻게 파시스트가 득세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 준 엄중한 경고이다.

개표가 거의 끝난 7월 1일 현재,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연합(RN)이 33퍼센트, 좌파 선거연합인 신인민전선이 29퍼센트를 득표했다. 신자유주의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의 선거연합은 고작 20퍼센트를 득표하는 굴욕을 맛봤다.

이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 분포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의석수는 7월 7일 일요일에 열릴 결선 투표에 달려 있다.

그러나 결선 투표에서도 같은 결과가 되풀이되면 국민연합 대표 조르당 바르텔라가 총리가 될 수 있다.

이는 전체 노동계급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중도우파인 공화당과 중도좌파인 사회당, 이 두 주류 정당이 여러 해 동안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고 이윤을 위해 노동계급을 쥐어짠 결과다.

국민연합의 선거 승리를 목전에 두고도 마크롱과 그의 동맹자들은 파시스트가 아니라 좌파인 장뤼크 멜랑송의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를 공격하면서 지난 2주를 보냈다. 1차 투표 결과가 나온 뒤 마크롱 정부의 총리였던 에두아르 필리프는 신인민전선의 가장 우파적인 일부만을 결선 투표에서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마크롱의 선거연합은 자신이 3위를 한 선거구에서 대부분 후보를 사퇴시켜 다른 후보가 국민연합을 패배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에게는 선거구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마크롱의 선거연합은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가 “의회, 보편주의, 유대인 혐오에 대한 공화주의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뻔뻔스럽게 비난했다. 이들은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를 파시스트와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허비할 시간이 없다. 6월 30일 밤 수많은 사람들이 파리의 거리로 나와 파시즘 반대 시위를 벌인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다. 스트라스부르 · 리옹 · 낭트 · 릴에서도 거리 시위가 벌어졌다. 더 많은 시위와 파업, 도로 점거가 필요하다.

국민연합은 거의 1200만 표를 득표했다. 사람들이 국민연합을 찍는 것을 두고, 그저 사회적 고통과 다른 정치 세력들이 좋은 정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릇된 반응으로 보는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그

파시스트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며 사회 상층부를 장악하면 파시스트 깡패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이다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파시스트 승리 선거와 거리 모두에서 파시즘을 패퇴시켜야 한다

찰리 김버

☞ 용어설명

프랑스 총선 방식

7월 7일 결선 투표가 치러질 것이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가려지려면 등록 유권자 중 최소 25퍼센트가 투표하고 한 후보가 그중 과반을 득표해야 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니 당선자 577명 중 압도 다수가 결선 투표에서 가려질 것이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등록 유권자 수의 12.5퍼센트보다 더 많이 득표한 후보들을 결선 투표에 올린다. 결선 투표의 승자는 다른 조건 없이 득표 수로만 가려진다.

것은 부분적 진실이지만, 그것이 전부 아니다.

파시스트들은 사람들이 느끼는 분노와 공허함을 이용해 자신들의 인종차별적, 이슬람 혐오적, 유대인 혐오적 목표를 포장한다.

바르텔라가 차기 총리가 된다고 해서 곧장 프랑스가 히틀러가 집권한 1933년 독일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 바르텔라에게는 좌파 · 노동조합 · 민주주의를 파괴할 거리의 군대나 힘이 없다.

그러나 바르텔라가 총리가 되면 상

사회 상층부에서 어떤 책략을 펴든, 파시스트들의 전진을 막고 그들을 찌그러뜨리는 데에 결정적인 것은 기층에서의 동원이다.

황은 질적으로 변할 것이다. 350만 명에 이르는 이중국적자를 핍박하고 이등 시민 취급하는 법들이 제정될 것이다. 무슬림과 파업 노동자, 시위대, 유색인종 청년, 인종차별 반대 운동가들을 훨씬 가혹하게 탄압할 재량이 경찰에게 주어질 것이다.

‘프랑스는 프랑스인을 위한 것’ 따위의 국수주의 광풍이 몰아칠 것이다. 가장 ‘충성스런’ 무슬림을 제외한 모든 무슬림이 범죄자 취급을 당할 것이다.

국민연합은 경찰 고위층이나 지역의 보건 · 교육 당국, 지역 의회로 자기 사람들을 진출시킬 것이다.

이미 리옹 · 몽펠리에 · 파리에서 폭력을 휘두른 바 있는 파시스트 깡패들은 사회 상층부가 자신들을 지지해 준다는 새로운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장할 것이다.

국수주의 광풍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막대한 자원이 있다. 6월 15~16일 주말에 국민연합에 맞서 약 80만 명이 거리 시위를 벌였다.

이 사람들을 동원하고, 국민연합의 이번 득표에 경악한 그 밖의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 사활적이다.

국민연합에 맞서는 투쟁은 국민연합의 친기업 정책만이 아니라 인종차별에도 맞서야 한다.

프랑스의 가장 투쟁적인 노조 연맹인 노동총동맹(CGT)은 이번 주에 옹계도 이렇게 지적했다. “국민연합은 최저임금 인상, 집세 동결, 금융 소득 과세에 반대 투표했다. 국민연합은 노동자가 아닌 기업주의 편이다. 국민연합의 복지 공약은 눈 녹듯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CGT는 인종차별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1000단어에 가까운 그 성명서에서 인종차별 문제는 종속절에서 한 번 언급될 뿐이다.

이민자 · 무슬림 · 난민에 관한 거짓말을 분쇄하지 않는 것은 국민연합의 주무기를 내버려 두는 것이다.

프랑스의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계



사진 출처 Photothèque Rouge

급 독립성(A2C)'은 이렇게 호소했다.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 학교, 일터의 모든 곳에서 파시즘에 반대하는 거점을 구축하자. 파시스트들의 집회에 맞불을 놓아 시위를 열고 그들의 운동에 맞서는 운동을 벌이자.”

“인종차별 반대를 반파시즘 투쟁의 핵심으로 삼자.”

‘계급 독립성’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과 인종차별 반대 운동, 여성의 권리와 기후 변화를 둘러싼 운동, 트랜스젠더 혐오에 맞선 운동을 중심에 놓아야 하며, 신인민전선을 중심으로 단결하라는 압력에 밀려 이 운동들을 미뤄 뒤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선 투표에서 신인민전선을 찍을 것이다. 신인민전선은 멜랑송의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와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사회당, 공산당, 녹색당 등이 모인 선거연합이다.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한 활동가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전했다. “결선 투표를 앞두고, 1차 투표 때 기권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동원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국민연합을 증오하지만, 신인민전선의 많은 득표는 실질적 성과입니다.”

멜랑송은 이제 프랑스가 신인민전선의 과반 의석 획득이나 아니면 재앙과 분열을 낳을 국민연합의 승리나 하는 갈림길에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인민전선에도 약점이 있다. 신인민전선에는 사회당 소속 전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처럼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를 정당화하고 노동계급을 공격해 국민연합의 부상을 가능케 해 준 자들이 포함돼 있다.

올랑드는 2012~2017년 대통령 임기 중 2년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찰에게 가혹한 탄압을 휘두를 권한을 부여했다. 2016년 올랑드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공격하는 중대 법안을 대통령 권한으로 통과시켰다.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일어났지만 올랑드는 물러서지 않았다.

2017년에 올랑드는 경찰의 살인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카즈뇌브법을 지지했

다. 2014년에는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를 탄압했다.

그런 자들을 중심으로 국민연합에 맞선 대안을 건설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럼에도 신인민전선은 그런 자들과 타협하고 있다.

“예외적 권한”

7월 7일 일요일 결선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든 격동이 일어날 것이다. 바르텔라가 총리가 될 수도 있다. 혹은 어떤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마크롱이 ‘기술 관료’를 총리로 지명할 수도 있다. 그와 관련해 유럽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티앙 라가르드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그러나 뻔뻔하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긴축을 추진하는 것은 파시스트들을 더 키울 뿐이다.

마크롱이 긴급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예외적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 16조를 발동할지도 모른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마크롱이 의회 없이 프랑스를 통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 상층부에서 어떤 책략을 펴든, 파시스트들의 전진을 막고 그들을 찌그러뜨리는 데에 결정적인 것은 기층에서의 동원이다.

지난 토요일 독일 에센에서 극우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당대회장 앞에서 7만 명 규모의 맞불 시위가 열린 것은 반격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좋은 징조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내년 1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회담을 한다고 상상해 보라.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와 프랑스 총리가 된 조르당 바르텔라,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 아르헨티나 극우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그 밖에 그들처럼 시궁창에서 기어나온 자들이 한데 모이는 광경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대응이 시급하다. 구체적인 인종차별 반대 선동과, 기업주와 자본주의를 향한 조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조직할 사회주의적 대안이 필요하다.

출처 Charlie Kimber, 'Urgent tasks for left after fascists win French election first round' (2024. 6. 30) / 번역 김준호



사진 출처 La France insoumise

6월 30일(위)과 6월 15일(아래) 파리에서 벌어진 인종차별·파시스트 반대 시위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QR

인민전선 - 파시즘에 맞서려면 반드시 필요한 연합인가?

일시 7월 11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흥사단 3층 강당 (해화역 1, 2번 출구 사이 위치)

발제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국제연락자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전문 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참가비 5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동부 지역 모임들 문의 010-8862-8377 / s-east@ws.or.kr



레닌과 민족 문제

일시 7월 10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한겨레교육 703호 (신촌역 6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김영익 <노동자 연대> 기자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전문 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참가비 4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 지역 모임들 문의 010-8074-2793 / s-west@ws.or.kr

파시즘의 귀환 - 1930년대로 돌아가는가?

일시 7월 13일(토) 오후 3시 장소 부산 하이텐 스테디룸 4층 psm강의실 (서면역 2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차승일 노동자연대 활동가

참가비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부산/울산 지역 모임들 문의 010-8028-8029 / busan-ulsan@ws.or.kr



아랍 정부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친구인가?

일시 7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 부평 힐스대관스튜디오 (부평역 7번 출구 도보 10분)

발제 박이랑 중동 문제 전문지 <미들리스트 솔리데리티> 공동편집자

마으준 이집트인 정치 난민 전문 통역사의 아랍어-한국어 순차통역 제공

참가비 4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인천 지역 모임 문의 010-6224-2157 / incheon@ws.or.kr



파시즘의 귀환 - 1930년대로 돌아가는가?

일시 7월 17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경기 마이크로웨이브공유오피스 수원점 mi이호 (수원역 7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김인식 <노동자 연대> 발행인

참가비 5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경기 지역 모임 문의 010-4738-2407 / kyongi@ws.or.kr

이렇게 생각한다(편집국 논설)

프랑스 국민연합 등 극우의 부상

유럽에서 극우가 중대한 전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의 4대 경제대국 중 가장 큰 두 나라가 프랑스와 독일인데, 만약 총선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면 프랑스에서는 파시스트 총리(조르당 바르텔라)가 등장하고, 독일의 9월 지방선거에서는 파시스트들이 중핵을 이루는 극우 정당 '독일을위한대안' AfD가 작센과 튀링겐의 주정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나이절 패라지의 극우 정당 영국개혁당(Reform UK)이 보수당에 대해 하려는 개입을 프랑스에서는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이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도움으로) 주류 중도우파 정당 공화당에 대해 하고 있다. '독일을위한대안당'(AfD)은 집권당 사회민주당(SPD)을 3위로 밀어내는 성공을 거뒀다.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의 이탈리아형제당도 유럽의회 선거에서 성공을 거뒀다.

위기의 양상

지금 시기는 1930년대를 어떤 점에서 실제로 재연하고 있다. 물론 똑같은 것은 아니다. 특히 위기가 전개되는 속도가 1930년대와 같지 않다. 우리는 러시아와 유럽 혁명(1917~23)의 여파 속에 있지 않고 그래서 1930년대 초나 1920년대 초 이탈리아 등지에서처럼 파시스트들의 거리 동원 수준이 높지도 않다. 그 보다는 주로 선거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거리 동원 형태로 빠르게 바뀔 수 있고, 지금은 그런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세계 어디에서든 극우의 부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일랜드를 보면, 2년 전만 해도 아일랜드



신자유주의적 중도의 위기 속에서 극우가 중대한 전진을 하고 있다. 프랑스 국민연합 지도자 르펜과 당대표 바르텔라(왼쪽에서 6, 7번째)

랜드 좌파들은 거리 동원하는 극우나 파시스트 세력이 아일랜드에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주민 반대 시위가 최근 선거에서 실패의 득표가 붕괴한 핵심 이유가 됐다. 실패인은 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다른 많은 문제에서도 오른쪽으로 이동했지만 인종차별 문제에 대응하는 데서는 완전한 무능을 드러냈다. 다만 급진좌파 연합 '이윤보다 인간이 먼저다'는 지방선거에서 예상보다 괜찮은 성적을 거뒀는데 이주민 문제에서 원칙을 지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도 수년 동안 극우는 거리 동원을 시도해 왔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보수당 정부의 지지율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나이절 패라지가 이끄는 영국개혁당이 지지율 17퍼센트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총선에서 최소 한 석을 확보할 듯하다.

극우의 위협은 일반적이 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여기저기서 진행되던 위기가 일반적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10년 전 그리스에서 시작된 위기가 최근 이탈리아에서 멜로니가 집권한 것으로 이어지고, 이제 더 확산되고 있다. 유럽의회 선거는 이제 대부분의 회원국뿐 아니라 심지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영국도 그렇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 만큼 지금 세계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서방 세계의 극우가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다고 친서방 세계와 한국의 좌파 전체를 향해 경종을 울려야 할 때다. 이 일이 조만간 한국의 정치에도 중요하게 될 것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우리는 좌파들을 향해, 인종차별 반대 운동 건설과 인종차별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실의 변화에서 핵심적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 프랑스 계급투쟁의 핵심적 요소는 1934~1936년 파시즘 반대 투쟁이었다. 1936년 트로츠키는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다"고 썼다. 물론 인민전선의 기회주의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당시 파시즘 반대 투쟁은 계급투쟁에서 좌파의 핵심적 과제였다.

그동안 적응하라는 압력이 좌파에게 꾸준히 가해져 왔다. "이주민 얘기는 하지 마라.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이주민에게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극우의 전진을 막을 방법이다." 하고 많은 좌파들이 말해 왔다. 그런 노선은 재앙적이었다는 증거가 바로 지금 상황이다.

유럽에서 극우가 부상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때에는 좌파들이 이 매우 중요한 전선에서 싸우는 것을 피한 것을 말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건설하는 데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며 이를 르펜의 부상 저지와 연결시키려 애쓴 활동가들에 대한 프랑스 좌파의 반응은 그리 좋지 못했다.

인종차별 문제와 정면 대결해야

지금 프랑스의 대다수 노동조합, 그리고 대다수 좌파들의 메시지를 들어 보면 이렇다. "극우와 파시스트들이 노동계급의 친구가 아니라는 점을 폭로하자. 그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주들의 편이다." 물론 극우와 파시스트들이 실제로는 (그들의 언사처럼) 급진적이지 않고 기업에 맞서지 않는다는 등의 얘기는 중요하게 선전해야 할 것들이기는 하다.

그러나 파시스트와 극우에 맞설 때 인종차별 문제, 이주민 문제, 이슬람과 무슬림 혐오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그리

"독일 우선" 팻말을 들고 있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 지지자

사구를 넘어 국제적 현상이 되고 있다



사진 출처: 가이스틀란

태풍의 눈은 프랑스

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태풍의 눈은 물론 프랑스다. 프랑스는 현재 극우 정부의 등장 위험이 매우 실질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가 성과를 거둔 이후 열리는 이번 총선의 결과로 극우 정부가 들어서면 르펜은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다. 동시에, 선거 차원과 거리 운동의 차원 모두에서 좌파적 대응도 분명 대규모로 존재하고 있다.

프랑스 총선 결과는 향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신인민전선이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지만, 국민연합이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그 덕에 안정적인 기반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왼쪽으로의 새로운 동력이 있다. 신인민전선은 분명 약점이 있지만, 사람들이 투표에 나서고 거리로 나서도록 만드는 기회를 열어 주고 있다. 이런 동력은 선거 결과로 표현될 수 있다. 거리 시위로도 맞서야 하지만, 선거에서도 맞서야 한다. 요컨대 선거 전선과 거리 전선 모두에서 열심히 조직해야 한다.

위험한 변화

마크롱의 의회 해산 결정은 중요한 문제였다. 파시스트가 유럽의회 선거에서 천만 표 이상 받은 것 자체가 아니라 마크롱의 결정이 방아쇠가 됐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파시스트가 정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위험을 매우 실질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6월 15~16일에 80만 명 규모의 커다란 시위가 벌어지는 등의 상황을 촉발한 것이다.

프랑스 좌파의 소수는 “바뀐 건 아무 것도 없다,” “대수롭지 않은 위험이다” 따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며칠간 프랑스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총선에서 파시스트들이 이겼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다. 여러 도시에서 파시스트 깡패들이 이주민, 성소수자, 노조 활동가들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크게 늘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거리에서 “우리는 나치다. 우리는 이슬람을 반대한다”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민연합이 정부를 접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구체화하면서

온갖 반동적인 자들과 파시스트들의 자신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합의 정부 접수 가능성에 지배계급도 영향을 받고 있다. 기업인들이 국민연합과 관계를 트려 하고 국민연합에 영향을 끼치고 또 그들과 어떤 거래가 가능한지 타진하려 하고 있다. 또, 정부가 기존 정책을 더한층 추진하도록 만들고 있다. 가령 카나키 문제가 있다. (한국 언론에서는 ‘뉴칼레도니아’라고 하지만 이는 식민주의 명칭이라 프랑스 급진/혁명적 좌파는 ‘카나키’라고 부른다.) 프랑스 정부는 6월 중순 카나키 운동의 지도자 한 명을 체포했고, 재판에 회부해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프랑스 본토로 끌고 왔다. 전형적인 식민주의 행태다. 그 한 달 전에만 해도 마크롱은 카나키를 방문해 그를 만나고 협상을 했는데 지금은 대응이 바뀐 것이다. 국민연합의 정부 접수 가능성이 지배계급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사례로, 프랑스 주요 TV 채널은 앞으로는 공공연한 극우 논평가들을 더 정기적으로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프랑스인들은 TV에서 하루종일 그런 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마크롱의 의회 해산 결정은 모든 갈등을 선거적·제도적 차원으로 몰아넣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거리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기층에서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조기 총선 결정은 모든 것을 선거 영역으로 밀치고 있다.

거리에서 반파시즘 반격이 있다. 6월 15~16일 프랑스의 여러 도시에서 열린 총계 80만 명 규모의 시위는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고, 거리로 나와야 한다”고 선언했다. 노동조합도 거의 모든 집회에서 파시즘 반대를 내세우고 있다. 6월 20일에는 여러 부문의 파업이 있었는데, 각 부문이 자신의 요구뿐 아니라 파시즘 반대 요구도 제출했다.

선거 전선과 거리 전선

반파시즘 집회들은 극우에 맞서기 위해 인민전선에 투표하라고 강조한다. 파시즘을 막을 대안으로 당장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좌파의 선거 승리밖에 없다고 보는 듯하다. 선거적 대안을 제시

고 직접적으로 논쟁하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에서 한치의 얼버무림도 없어야 한다. 노동조합과 좌파 대다수의 입장은 이와 전혀 다르다. “그런 쟁점은 괜히 꺼내지 마. 그 정당들의 실체가 친기업이라는 것만 제기하면 돼.”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본질적으로 파시즘과 극우는 이슬람/무슬림 혐오와 인종차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런 문제들을 회피하지 말아야 하고 관련된 모든 쟁점에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예컨대 프랑스의 많은 노조들의 접근법은 ‘저들의 친기업 본색을 들추되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라고 요약할 수 있다.

독일의 좌파당 디링게 안에서 이 문

제로 논쟁할 때, 자라 바겐크네히트는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이끌었다. 그 결과 AfD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영국에서는 조지 갤러웨이가 영국판 자라 바겐크네히트 같은 인물인데, 그는 가자지구 학살에 반대하고 시온주의에 반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난민에 반대하고 있고,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반대하고 있다.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성장시키고 또 노동계급 안에 정착시키는 것은 모든 곳에서 만만찮은 도전일 것이다. 그러나 극우와 파시스트에 맞서면서 이 문제를 정조준하지 않는다면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주장이 설령 노동계급 안에서 인기가 없더라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2019년 영국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위) 지난 6월 파리에서 열린 대규모 반파시즘 시위(아래)

하는 것뿐 아니라 거리와 지역사회에서 국민연합과 대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으로선 거리 대치보다는 선거 강령이 중요하다는 생각인 것이다. 급진적 좌파도, 심지어 자율주의자나 아나키스트까지도 지금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인민전선에 투표하라는 것이다.

그에 따라 파시스트에 맞서 강령적으로 단결하라는 압력이 거대하다. '설령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반파시즘이라는 한 배에 모두 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단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파시즘에 맞설 대안은 대안적 [선거] 강령밖에 없다고 보는 것을 혁명적 좌파인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어도 받아들이는 수는 없다.

좌파 연합(신인민전선) 상층에서부터 선거 강령(아주 온건하다)에 집중하려는 역학이 작용하며, 좌파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쟁점들은 뒤로 미뤄두려 하는데, 이런 쟁점 중 핵심 쟁점은 인종차별과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다.

사람들은 거리 시위에 나서면서도, 선거적 대안을 유일한 해법으로 여기면서 '좌파(신인민전선) 지도자들이 파시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믿는다.'

총선 후 상황

프랑스 총선 2차 투표 결과가 어떻게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2차 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 번 상상해 보자.

(1) 어쩌면 신인민전선이 이길 수 있다. 그러길 바라자. 만약 신인민전선이 이긴다면 그들은 자본가들과 채권단의 불채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 국민연합이 승리해서 파시스트 조르당 바르텔라가 총리가 될지도 모른다.

(3) 가장 가능성이 큰 일로, 어느 쪽도 과반 확보에 실패해 마크롱이 프랑수아 올랑드나 인민전선 내 우파적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총리를 고를 수 있다.

(4) 마크롱이 조기 대선 실시라는 도박에 나설 수도 있다는 풍문도 있다.

(5) 마크롱이 프랑스 헌법 16조를 발동해 의회를 건너뛰고 포고령으로 통치하려 들 수 있다는 풍문도 있다.

(4)나 (5)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얘



거리 폭력을 공공연히 지지하는 프랑스의 나치 조직 '5월 9일 위원회'

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런 만큼 본지는 세계와 한국의 좌파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중도 좌/우 정당들이 몰락한 공백을 메우며 파시스트와 좌파 모두 득표가 늘 것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그리고 국민연합이 천만 표를 득표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하지만 독일에서 그랬듯이 거리 시위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독일에서는 올해 초 수백만 명이 시위에 나서자 AfD가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았던) 23퍼센트가 아니라 16퍼센트를 득표했다. 그 차이는 시위의 효과였다.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연합은 적어도 천만 표를 얻겠지만 거기서 얼마를 더 얻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거리 동원이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총선 후 상황은 매우 휘발성이 크고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물론 현재 반파시즘 운동이 고조돼 있지만, 전면적 수준으로까지 고조되지는 못했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온 대규모 운동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거리로 나온 운동은 아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더 많은 프랑스인들이 신인민전선에 투표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조직하는 것이다. 거리에 나서는 것, 지역사회에서 파시스트에 맞서는 것, 직장에서 조직을 만드는 것, 파업하는 것 등을 조직하는 것이다. 프랑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파업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파업을 명령할 가능성은 있다. 대규모 파업은 파시즘을 막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더구나 아직 어디를 찍을지 마음을 못 정한 수백만 대중에게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다. 2차 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후에 대비할 유일한 방법은 기층에서 조직하고 싸우는 것이다.

맺으며: 현상의 모순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세계 정세에서 국면 변화를 나타낸다.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정부 등의 경우처럼 극우의 부상만 국제적 현상이지만 당장 최전선이 그어진 곳은 유럽이다.

지금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타리크 알리가 말한) "극단적 중도," 즉 신자유주의적 주류 정당들이 위기에 처한 것이다. 내부적으로 그들은 '멜트다운' 상태다. 오랫동안 유럽의 주요 중도우파 정당이었던 두 곳 — 드골의 후신인 프랑스 공화당과 영국 보수당 — 은 지금 완전히 산산조각난 상태다. 영국 보수당은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로 스스로 와해되고 있다.

제국주의 문제와의 관계

유럽의 파시스트들은 미국 제국주의와의 관계 문제를 놓고는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멜로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지한다. 르펜은 그런 입장이 아니지만, 존경받을 만한 정치인으로 보이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길 원해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영국의 패라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 탓이라고 말했다.

AFD가 많이 득표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 세력을 자처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있었다. 이 점은 자라 바겐크네히트도 마찬가지다. AFD의 그런 입장은 그들이 극도로 군국주의적인 세력임을 고려하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러나 좌파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약

점을 보이면서 다른 세력이 파고들 여지를 제공했다.

이렇듯 극우가 모두 미국 제국주의를 일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들의 세력이 더 커지면 이 문제를 놓고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테지만 말이다. 아무튼 제국주의 문제와 극우 부상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모종의 시급성 구실을 하는 쟁점이 됐거니와, 그 쟁점으로 엄청난 대중 동원이 일어나고 있고, 좌파(급진 좌파와 혁명적 좌파)가 거기에 힘을 일정 부분 제공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도 인종차별 반대, 제국주의 반대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좌파가 파시스트에 맞서 거리로 나설 자신감을 주고 있다.

이 문제는 프랑스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지금 프랑스 선거를 보면, 마크롱과 많은 자본가들(단지 프랑스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이 신인민전선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인민전선을 분열시키려 한다. 그들은 장뤽 멜랑송을 골칫거리라고 보는데 멜랑송은 최근 선거에서 가자지구 문제에 집중하며 노동계급과 도시민들 사이에서 커다란 지지를 받았다. 저들은 멜랑송을 데마고그라고 비난하지만, 멜랑송은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선거적 이익을 위해) 팔레스타인 문제를 앞세워 자신의 정당 기반을 만들려 한다. 그리고 그 때문에 프랑스와 유럽 지배계급은 그를 증오한다. 그들에게 큰 위협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팔레스타인 문제는 프랑스 선거 역학의 중요한 일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국가안보 관료들에게는
산송장 같은 바이든이 더 믿고 맡길 만할 것이다

지난주 6월 27일부로 조 바이든의 대통령 임기는 사실상 끝난 듯하다. 그로부터 한 주 전에 우파 역사가 니얼 퍼거슨은 이런 상상을 했다고 밝힌다. “어느 날 미국의 수병들은 자신이 탄 항공모함이 대만해협 어딘가에서 침몰하는 가운데 이렇게 자문할 것이다. ‘우리가 소련처럼 되고 있나?’”

여기서 퍼거슨은 “정체 시대”라고 불린 소련의 쇠락기를 언급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친 그 시기에 소련은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처참하게 붕괴했다. 제국이 군비보다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하면 그것은 쇠락의 확실한 증거라고 퍼거슨은 주장한다. 그리고 퍼거슨은 미국이 올해부터 그런 처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퍼거슨은 이어서 이렇게 주장한다. “더 인상 깊은 것은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발견되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유사성이다. 노인들에 의한 지배는 소련 말기 지도부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노망난 레오니드 브레즈네프와 유리 안드로포프, 콘스탄틴 체르넬코가 바로 그런 특징의 화신들이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의 소련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실 그들을 두고 노망났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들은 그저 늙고 노쇠했을 뿐이다. 소련의 해체를 이끈 지도자는 훨씬 젊고 혈기 왕성한 미하일 고

르바초프였다[소련 해체 당시 60세 —역자]. 논평가 마크 크로토프가 지적했듯이 “바이든을 그 세 인물과 비교하는 것은 글썽, 러시아 혐오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비교는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을 시청한 많은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와닿았다. 78세의 도널드 트럼프가 81세의 바이든과 대결한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전 세계의 청중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것은 바이든의 헛설수설과 조리 없는 언동이었다. 트럼프는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거짓말쟁이지만 그래도 정신은 말짱했다.

바이든의 상태를 숨겨 온 측근들

저명한 탐사보도 언론인 시모어 허시는 이렇게 썼다. “내가 수개월 동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바, 이 모든 사태의 이면에 있는 진실은 바이든이 자신과 대외 정책 보좌관들이 펴 온 정책들의 모순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젯밤 대선후보 토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미국과 전 세계에 보여 줬다.

“진정으로 수치스러운 것은 단지 바이든이 아니라, 바이든의 상태를 갈수록 비밀스럽게 숨겨 온 바이든의 측근들이다. 바이든은 ... 지난 여섯 달 동안 급격하게 노쇠해져 포로와 같은 신세가 됐

다. 한때 상원에서 바이든과 막역하게 지낸 사람들로부터 몇 달 동안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바이든은 갈수록 외톨이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바이든이 답신 전화를 하지 못한다고 전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이든은 우드로 윌슨[1913~1921년 미국 대통령 재임]과 비슷한 처지다. 1919년 10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윌슨은 남은 임기 18개월을 거의 마비된 채로 보냈다. 윌슨의 아내와 보좌관들은 윌슨의 상태를 비밀에 부치고 윌슨 대선 결정을 내렸다.

미국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이 있다. 특히 대외 정책과 전쟁에 관해 막강한 권한이 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세계 제국을 관리하는 국가안보 관료 기구의 결정을 대체로 승인하고 그들의 공식 대변인 노릇을 하게 됐다. 오바마의 한 보좌관은 그 관료 기구를 “블롭”이라고 일컬었다.

블롭에게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대변인이다. 중국을 상대로 한 바이든의 경제 전쟁이 트럼프를 계승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그럼에도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 핵심 권력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뉴욕 타임스>는 “나라를 위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다급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대선 완주를 고집하고 있고, 민주당의 핵심 권력층은 바이든의 전임자인 오바마의 지도하에 바이든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 에마누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엘 마크롱의 재앙적인 조기 총선 결정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적 중도가 극우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의 완주는 바이든의 측근들에게 득이 된다. 바이든이 완주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직책과 권한을 한동안 붙들고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바이든을 다른 후보로 교체하려면 민주당은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와 온갖 들도 보도 못한 주지사들 사이의 경쟁을 치러야 할 것이다.

거기서 누가 이기든 트럼프의 인지도와 대중적 지지를 능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패는 인플레이션이 일반 대중의 생활 수준에 가한 심각한 타격이다. 트럼프는 그 패를 계속해서 활용할 것이고, 그 덕분에 트럼프는 백악관으로 귀환할 공산이 크다.

출처 Alex Callinicos, 'The Biden presidency looks weaker by day' (2024. 7. 02) / 번역 이원웅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ws.or.kr/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



-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 61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파시즘의 귀환: 1930년대로 돌아가는가?

김인식

유럽에서 파시스트 정당들이 약진하는 것은 경악할 일이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이 사민당을 누르고 2위를 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총리 조르자 멜로니가 있는 이탈리아형제당(FdI)이 1위를 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마린 르펜과 조르당 바르텔라가 있는 국민연합(RN)이 1위를 차지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이 시행한 조기 총선에서 국민연합은 '집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유럽의 경제 대국들이자 서방 주요 7개국(G7)의 회원국들이다.

이런 극우의 부상은 유럽만이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재집권할 수도 있고, 라틴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에서는 극우 정치인 하비에르 밀레이가 집권했으며, 남아

공에서는 극우 정당인 애국동맹이 연정에 들어갔다.

극우의 부상을 먼 나라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일랜드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사례다. 아일랜드 좌파는 아일랜드가 파시즘의 무풍지대라는 데 자부심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극우가 처음 당선됐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당선자를 내지 못했지만 꽤 득표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난민들이 머물고 있던 호텔(난민 수용소)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하는 등 크고 작은 난민 반대 시위들이 있었다. 그러나 아일랜드 최대 개혁주의 정당인 신페인당은 난민 반대 시위들을 과소평가했다. 그 틈을 비집고 극우가 등장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한국의 우익도 고무될 수 있다. 극우의 위험이 서구를 넘어 일반화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파시스트들 이탈리아형제당의 멜로니(왼쪽)와 프랑스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오른쪽)

왜 유럽에서 파시즘이 급증하는가?

당장 파시즘 등 극우와의 대결의 최전선은 유럽이다. 왜 유럽에서 파시즘이 급증하고 있는가? 유럽 사회가 우경화됐기 때문이 아니다. 파시즘의 부상은 오늘날 자본주의가 겪고 있는 다중 위기의 산물이다. 금융 위기, 기후 위기, 팬데믹, 전쟁, 소요 등 자본주의의 재난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중도 좌파나 중도 우파의 기성 정당이 배출한 유럽 정부들은 이런 위기에 대응해 점점 더 공공연하게 극우적 언사를 쓰고 인종차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정부들의 국경 폐쇄로 지난 10년 동안 지중해에서 사망한 난민이 2만 7000명이 넘는다. 이슬람 혐오, 난민 추방, 난민 수용소 설치 등도 유럽 정부들의 주요 정책이다.

인종차별의 목적은 망가진 삶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다른 차별받는 사람들(무슬림, 난민, 이주민, 로마인, 소수 민족, LGBT 등)로 향하도록 만들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그리고 대중 저항을 통제하는 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유럽 정부들은 인종차별을 이용해 국가의 통제와 탄압을 강화하고, 새로운 무장 기구를 신설하고, 경찰·군대·정보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기성 정당들이 앞장서서 인종차별을

부추기자 파시스트들이 비빌 언덕이 늘었다. 예컨대, 프랑스 국가가 무슬림 여성이 전통 복장을 하고 학교와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금지하자, 파시스트들은 그런 복장의 여성이 유럽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파시스트들은 기성 정치 시스템에 부합하는 세력으로 변신하는 데에 이슬람 혐오를 이용하고 있다.

무슬림 혐오

그러나 유럽 좌파들의 대부분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왔다.

독일 좌파는 오랫동안 국가 뒤에 서서 파시즘을 반대했다. 반나치법을 통해 히틀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프랑스 좌파 지도자들은 르펜의 국민연합을 좀 더 강경한 우익 정당 취급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좌파는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인종차별에 타협했다. 예컨대, 독일 좌파당에서 분당한 자라 바젠크네히트는 “이민자가 너무 많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영국에서는 조지 갤러웨이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인종차별에 맞서는 것을 회피한다면 파시즘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없다. 인종차별 반대는 엔(N)분의 일 전투가 아니라, 파시즘을 막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파시즘은 특별한 극우

파시즘을 매우 느슨한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다. 한국의 일부 좌파는 윤석열 정부를 ‘파쇼’라고 부른다. 그러나 파시즘은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를 향한 저주 같은 게 아니다.

파시즘은 특별한 극우다. 물론 파시스트가 아닌 극우는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선거에서 극우를 지지하는 표가 늘어나면 파시스트가 성장할 토양이 된다.

파시즘은 단순히 반동적인 인종차별이나 국수주의적 편견 같은 게 아니다. 대부분의 기성 자본주의 정당들도 표를 얻고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종차별을 이용한다.

파시즘이 기성 정당들과 다른 점은, 인종차별을 부추겨 자신의 정치적·사회적 지배력을 확립하면 모든 좌파 조직과 노동계급의 모든 독립적 조직을 분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이다.

흔히 파시즘 운동은 히틀러 같은 반쯤 미치광이가 의회 밖에서 대중 조직을 건설하는 데서 시작한다. 파시즘 운동은 소상인, 상점 주인, 자영업자 등 프티부르주아지를 주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파시즘은 이들의 대중 운동이다. 히틀러는 대중 운동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했다. “작은 사람은 벌레 같다고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거대한 용의 일부로 느끼게 할 운동에 참가시킨다.”

프티부르주아지는 자본주의의 위기로 고통받지만 자본가와 노동계급을 모두 싫어하고 경멸한다. 또, 소수민족과의 경쟁으로도 고통받는다고 종종 느낀다.

파시스트들은 민족적·인종적 ‘순수성’을 설파해 이런 소수자들에 대한 응어리와 좌절감을 표출하는 동시에 좌파와 노동계급 조직에 대한 증오심을 키운다.

미친개

파시스트들이 프티부르주아지 속에서 대중적 기반을 구축해 내면, 노동계급의 일부, 특히 소규모 공장 노동자나 장기 실업자처럼 독립적인 계급 조직의 전통이 없는 사람들과 빈민들 사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파시즘의 주된 기반은 프티부르주아지다.

간혹 처음부터 파시스트의 메시지를 지지하는 일부 지배자들이 있다. 그러나 자본가 계급의 주요 부분은 시스템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 않는 한 파시즘을 신뢰하지 않는다. 자신의 패스 미디어, 온순한 의회 정당, 온건하고



1930년대 권력을 잡은 히틀러 그의 집권은 위기의 자동적 산물이 아니라 좌파의 정치적 패배였다

경제주의적인 노동조합 지도자 등 좀 더 “평화적인” 수단들을 통해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은 파시스트들이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직접 전면적으로 실행하면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 이윤 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상시에 지배계급은 파시즘 운동을 좌파와 노동자 조직에 대한 균형추로 이용하지만 자신들에게 기어오르지 못하게 한다. 필요하면 경찰을 통해 파시스트들을 견제한다. 물론 노동계급 운동을 상대로 훨씬 더 자주 경찰력을 사용하지만 말이다.

이게 1920년대 초 이탈리아와 1930년대 초 독일에서 지배계급이 파시스트들을 다룬 방식이었다. 이탈리아 지배계급은 1920년 중반부터 1922년 중반까지 파시스트를 노동자·농민 조직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한편, 우익적인 의회 정부의 집권을 지지했다.

독일 지배계급도 1929년부터 1932년 말까지 나치를 노동자 조직에 대한 균형추로 삼는 한편, 권위주의 정부로 하여금 노동자들의 조건을 야금야금 공격하도록 했다.

이렇듯 지배계급은 프티부르주아 파시스트 무리를 노동운동을 겁주고 위협하는 데 사용할 미친개로 여겼다.

그러나 엄청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위기에 대한 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지배자들은 미친개에게 권력을 넘겨줬다. 대중적 파시스트 조직은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 침투할 수 있고, 국가의 힘과 결합되면 권위주의 정부가 국가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노동계급 조직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22년 10월 이탈리아 국왕과 산업 자본가의 당인 자유당은 무솔리니에게 권력을 넘겨줬다. 독일에서도 군부와 대자본가들은 1933년 1월에 히틀러의 집권에 동의했다.

프티부르주아지를 기반으로 하는 파시즘은 대기업과 국가의 승인 없이는 권력을 장악할 수 없다. 히틀러는 1923년에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굴욕적인 패배를 겪었다.

파시즘의 성공은 아래로부터 구축된 프티부르주아 운동과 지배계급의 위로부터의 결정이 결합되는 데 달려 있다. 이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파시스트 국가 수립 시도는 실패했다.

파시즘은 1930년대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현재 유럽은 1930년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오늘날과 1930년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기 전에 먼저 193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자. 1930년대는 고전적 파시즘이 승리했던 시기다. 나치 또는 나치 부역 세력이 독일·스페인·프랑스 등에서 집권했다.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은 이미 1922년에 집권했다. 당시 파시스트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1930년대는 경제·정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때였지만, 파시스트의 집권은 결코 위기 상황의 자동적 산물이 아니었다. 1918~1919년과 1923년 독일, 1919~1920년 이탈리아도 심각한 위기를 겪었는데, 그때 프티부르주아지는 노동운동을 지지했다. 노동운동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1930년대 파시즘의 승리는 좌파의 정치적 패배를 딛고 일어난 일이었다. 1930년대 독일 나치의 집권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흔히 1918~23년 독일 혁명의 역할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러시아의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히틀러의 집권을 1918년 독일 혁명 이래 15년 동안 전개된 반혁명적 노력의 정점으로 묘사했다. 트로츠키는 이렇게 썼다.

“사민당이 부르주아지를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 구했다면, 이번에는 파시즘이 부르주아지를 사민당에서 해방해 줄 차례다. 히틀러의 뒤집기는 반혁명적 전환의 사슬에서 마지막 연결 고리일 뿐이다.”

1918년 11월 노동자와 병사들이 독일 카이저(황제)를 전복하고 평의회를 수립한 뒤 제1차세계대전을 종식시켰다. 그러나 바이마르공화국을 관리하게 된 사민당은 혁명을 통제했다. 독일 혁명은 1923년에 패배로 끝났다.

나치당은 1919년에 창당됐고, 히틀러는 1923년 10월 돌격대를 이끌고 뮌헨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실패했다. 나치는 위기에 빠졌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924~1929년에 13만 명에 이르는 중핵 조직을 구축했고, 이들이 이후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

독일 공산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파시스트 정당 사이의 차이를 보지 못

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 때문에 사민당은 헌법으로 나치를 막을 수 있다고 착각했다. 1932년 4월 대선에서 보수의 대부 격인 힌덴부르크를 지지하기까지 했다. 힌덴부르크가 히틀러에 비해 ‘차악’이라는 논리였다. 힌덴부르크는 9개월 뒤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했다.

공산당은 자본주의 전복과 나치 분쇄를 원하는 수십만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대중 정당이었다. 1932년에 공산당원은 36만 명이었다. 공산당의 준군사 조직인 적색전선 전사동맹(RFB)에는 10만 명이 있었다.

치명적 실수

그러나 공산당 지도부는 스탈린주의 코민테른이 지시한 초좌파적 종파주의 노선을 고수했다. 사회민주주의가 파시즘의 쌍둥이 형제인 ‘사회파시즘’이라며 사민당과의 공동 행동을 일절 거부하는 정책이었다.

공산당은 사민당 노동자들에게 사민당 지도자들을 그저 비판하며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들이라는 최후통첩적 제안만을 했다.

당시 트로츠키는 매우 중요하고 통찰력 있는 비판을 제공했다. 트로츠키는 주류 보수 정당과 파시즘 정당의 핵심적 차이를 강조했다. 파시즘은 프티부르주아지에 기반을 두고 노동자와 농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국가 권력을 장악하면 보통의 자본가 정부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저항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트로츠키는 파시즘에 맞서는 특별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로츠키는 독일에서 파시즘과 싸우기 위해 (공산당으로 조직된) 더 급진적인 노동자들이 덜 급진적인 노동자들의 정당(개혁주의적인 사민당) 지도부에게 공동 행동을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치에 맞서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을 공동으로 동원하는 정책은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첫째, 거리에서 실제 힘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다. 나치 돌격대 40만 명은

▶ 10면으로 이어짐

▶ 9면에서 이어짐

투쟁 경험과 힘을 가진 수백만 명의 좌파 노동자들과 맞붙게 될 것이고, 그리되면 극복이 쉽지 않은 트라우마를 안게 될 것이다.

둘째, 지배계급은 나치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마지막 단계를 밟기 전에 심각하게 재고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노동운동의 역동성을 고무할 것이다. 나치뿐 아니라 해고와 생계 악화에 맞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트로츠키가 제안한 공동전선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사민당·공산당 지도부는 공동 행동을 거부했다. 그 덕분에 나치는 실질적인 저항을 받지 않고 집권했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파시즘에 맞서 8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일터와 거리에서 투쟁을 키워야 한다

현재 유럽은 1930년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거리와 일터에서 단결해 파시즘을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1930년대의 경험은 파시스트의 잔인함이 일단 시작되면 끝이 없음을 경고한다. 자본주의의 역사에는 인종차별적 정부들이 많았다. 그러나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600만 명을 학살한 정권은 없었다.

물론 현재 경제 위기가 하도 심각해 유럽 자본가들이 1920년대와 1930년대처럼 파시즘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지금 프랑스의 몇몇 대자본가들은 파시즘을 차악으로 선택할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또, 빈곤으로 인해 “발광한”(트로츠키의 표현) 프티부르주아 대중이 거리 전투에 기꺼이 목숨을 걸고 나서는 상황도 아니다. 그래서 현재 파시스트의 거리 동원력은 약하고, 주로 선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설령 이번 프랑스 총선에서 파시스트가 총리가 된다고 해서 프랑스가 곧장 1933년 독일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연합은 아직 좌파·노동조합·민주주의 기구를 파괴할 거리 운동이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파시스트 총리가 등장하면 상황이 질적으로 바뀔 것이다. 파시스트들은 국가 기구들에 터를 잡고 그리되면 거리의 파시스트 깡패들이 힘을 받을 것이다. 이주민, 난민, 무슬림, 각종 시위들, 파업 등을 지금보다 훨씬 혹독하게 공격할 것이다.

따라서 파시즘의 위협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즉각 모두 단결해 행동해야 한다. 6월 15~16일 프랑스에서 파시즘에 반대해 약 80만 명이 거리 시위를 벌인 것은 희망을 보여 줬다.

프랑스 좌파 정당들은 이 격변에 대응해 선거 연합인 ‘신인민전선’을 결성했다. 멜랑송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사회당, 공산당, 녹색당, 반자본주의신당 등이 신인민전선에 참여하고 있다.

질적 변화

이 선거 연합의 결성은 아래로부터 커다란 압력을 받은 결과였다. 신인민전선이 결성된 덕분에 사람들이 투표에 참가할 동기가 부여됐다. 프랑스 총선에서 국민연합이 패배한다면 통과할 것이겠지만, 최종 선거 결과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선거 전선과 함께 거리에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계속되는 한 국민연합의 선거적 위협과 파시스트 깡패들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궁극으로 승패는 선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터와 거리에서 벌어지는 투쟁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신인민전선은 1930년대 인민전선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모방하고 있다. 물론 신인민전선은 고전적 인민전선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중도에 깨질 수도 있다.

1930년대 인민전선을 장밋빛으로 회상해서는 안 된다. 인민전선은 공동전선을 더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공동전선을 거부한 것이었다.

트로츠키가 말했듯이, 혁명가들과 개혁주의 노동자들이 공동 행동을 위해 같은 당에 가입해야 하는 것도, 모든 사안에 같이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개혁주의 정당과의 협력은 강령이 아니라 제한된 구체적 쟁점에 대한 일시

적 합의에 근거한다. 이때 혁명적 당은 정치적·조직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독립성의 핵심은 동맹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인민전선은 공산당이 친자본주의 정당과 동맹을 맺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이었다. 그래서 인민전선의 강령은 노동자 정당이 노동계급의 궁극적 목표(해방)를 포기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부르주아지의 목표에 종속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즉, 계급 협력 정책이었다.

계급 협력

역사적으로 인민전선은 자본주의 국가의 의회 제도, 즉 위로부터의 개혁에 의지했다. 그래서 인민전선은 노동계급을 이데올로기적·정치적으로 무장시키는 게 아니라 무장해제시켰다.

1936년 프랑스에서 인민전선은 6월 총파업을 중단시켰다. 스페인에서는 “먼저 내전에서 승리한 다음에 혁명을 말할 수 있다”며 혁명 운동을 탄압해 프랑코와의 내전에서 패배를 자초했다. 그 뒤 제2차세계대전은 터졌다. 인민전선은 파시즘과 전쟁 둘 다 막지 못한 것이다.

현재 프랑스 신인민전선의 두 축은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와 사회당이지만, 공약은 사회당의 정치가 상한선이 됐다. 신인민전선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하마스의 ‘신정주의’ 반대를 공약했다. 그럼으로써 서방 제국주의를 지지한 것이다.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측은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서 굴복했다.

파시즘 반대 운동을 건설할 때 파시

스트들의 힘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되면 우리 측의 반격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과소평가는 반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반격은 가능하다. 극우와 파시즘의 위협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파시즘 반대 공동전선을 구축해, 지역·일터·학교 어디에서든 파시스트와 극우에게 활동 공간을 내주지 말아야 한다.

서방 세계의 혁명가들은 파시즘 반대 투쟁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과 연결시켜야 한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전례 없는 규모로 성장해 서방 권력자들에게 큰 곤란을 안겨 주고 있다. 그런 운동의 영향력과 자신감을 파시즘 반대 운동 건설과 연결시켜야 한다.

더 읽을거리



추천 글

1933년에 나치는 어떻게
쉽사리 권력을 장악했는가?
최일봉, <레프트21> 116호

조르자 멜로니의
이탈리아 총리 등장을 계기로
무솔리니의 집권을 돌아보다
사이먼 바스케터, <노동자 연대> 473호

추천 소책자

《파시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레온 트로츠키 지음, 최일봉 옮김
노동자연대, 74쪽, 3,000원
※ 노동자연대 웹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책

《파시즘, 스탈린주의, 공동전선》
레온 트로츠키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424쪽, 18,000원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과 집단 휴진

강경한 보수적 저항에 밀려 한발 한발 물러서는 윤석열 정부

장호중 의사, 〈노동자 연대〉 기자

6월 말로 예정됐던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은 동력을 크게 잃었다.

사회적 여론이 교수들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진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의대 증원을 지지한다. 환자 단체들은 집단 휴진에 항의하는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대개 정부·병원 측과 전공의 사이 중간관리자로서, 의사 수 증가의 영향을 당장 받는 처지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정부와 전공의 양측 모두 물러설 조짐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무기한 전면 휴진 같은 행동이 윤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고 여겼을 법하다.

중소병의원 개원의들이 주축인 의협도 하루 휴진 이상의 행동은 벌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의협 회장 임현택은 합의되지 않은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가 내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결국 대정부 협상을 담당하기로 한 ‘올바



‘과학적 결론’이라더니 벌써 4분의 1이나 줄었다

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서도 밀려났다.

그럼에도 지금의 교착 상태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압도 다수가 복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 반대 요구는 지지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설사 최종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하더라도 파업을 이어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득이 된다고

여기는 듯하다.

증원 규모는 이미 2000명에서 1500여 명으로 줄었다. 또, 사태 초기의 강경한 언사와 달리 정부는 이제 사실상 ‘2025년도 의대 정원’을 제외한 모든 문제에서 협의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슬금슬금 타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전공의들에게 내렸던 행정처분을 중단한 데 이어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정처분 기간의 위반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다. ‘복귀’를 처벌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협박했지만 정작 복귀한 전공의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이 의대 교수들이나 의협 측의 절충 시도도 거부하고 완강히 버티자 대학병원 교수들과 의협도 다시 ‘전공의·의대생의 요구를 수용하라’ 하며 전공의들의 뒤를 쫓는 형국이다.

개원의들과 대학병원 교수들이 참여하는 올특위는 7월 26일 하루 휴진을 예고했다. 여름 휴가철이라 일년 중 환자가 가장 적을 때다.

민주당, 수가 인상이 대안?

민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을 지지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졸속 추진을 꼬집는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은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해결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2010~2020년 사이에 건강보험 수가 정확도는 3퍼센트 밖에 개선되지 않았다.”(김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수가 인상이라는 당근을 의사들에게 쥐서 타협하자는 얘기다. 각 분과의 수가가 제로섬 게임처럼 결정되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대개 전체 수가가 인상되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보험료 인상의 명분으로 삼아 왔다.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의협 달래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의료 불균형 문제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실제로 김윤 의원이 언급한 기간의 3분의 1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기였고, 이 시기 건강보험 보장성은 미미하게 상승한 반면, 건강보험료는 크게 인상됐다. 필수·지역 의료 불균형은 더 심화됐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파업에 참가한 의사를 진료 거부 혐의로 고발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임금노동자들인 전공의들의 파업을 처벌하는 것은 우리가 지지할 수 없는 문제다.

게다가 간호사 등 다른 병원 노동자들이 쟁의에 나설 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국회 청문회가 보여 준 것

6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는 큰 기대를 불러 모으지는 못했지만 현 사태의 몇 가지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첫째, 정부는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는커녕 공감도 못 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6월 20일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만 3603건, 피해신고도 812건이나 됐다. 수술 지연이 475건, 진료 거절이 120건이나 됐고, 성남시에서는 수술 날짜를 잡지 못해 대기하던 환자가 6월 25일 사망하기도 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병원 문부터 열어야 한다는 지적에 “지금 닫은 병원이 없고요. 최소한의 진료를 다 하고 있다”고 냉소적으로 답했다.

정부가 처음 대책이라고 내놓은 ‘집단 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료적 지원이 아니라 환자들이 의사들을 형사고소하도록 법률 지원을 해 주는 곳이었다. 환자들더러 자기를 진료해 온 의사를 하루아침에 고소하라니 실효성도 없

고 오히려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많았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반면, 대학병원 측에는 지금까지 1조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을 지급해 손실을 벌충해 주고 있다.

둘째, 윤석열의 2000명 증원 발표는 총선을 염두에 둔 졸속 조치였다.

윤석열은 2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오후에 구체적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는 같은 날 오후 2시였지만 기자들은 3시에 브리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기중이었다. 심지어 〈문화일보〉는 회의가 열리기 두 시간 전에 2000명 증원 계획을 확정적으로 보도했다. 이날 전까지 2000명이라는 숫자는 한 차례도 거론된 적이 없다.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는 들러리에 불과했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물음이 반복되자 조규홍은 당일 오전에 자신이 처음으로 2000명이라는 수를 결정해 대통령실에 통보하고 오

후에 열린 보정심 회의에도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다. 그 전까지 한 번도 언급이 없었던 이유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었다면서도 ‘당사자들과의 논의는 충분히 했다’고 한다.

‘과학적 결론’이라는 거창한 표현에 어울리지 않게 계산은 단순했다. 부족한 인원이 1만여 명인데, 의대가 6년제이니 5년 동안 2000명씩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증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 계획도 아직 없다. ‘의대’ 증원이므로 교육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이다.

셋째, 의협 회장 임현택은 노동자 등 서민층의 불만과 요구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망가뜨리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시장화된 의료 시스템에서 혜택을 잔뜩 누리는 수혜자들에게만 현 의료 시스템이 “멀쩡하다”고 여길 것이다.

아리셀 참사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기업과 정부가 참사를 야기했다

임준형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그중 18명이 외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였고, 귀화한 한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은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다. 숨진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중국 동포(조선족)였고, 귀화 절차를 밟고 있던 라오스인도 1명 있었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사망한 것이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6월 30일 유가족협의회 기자회견에서 한 유족은 자신도 아리셀 공장에서 이틀간 일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사측이 노동자 안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폭발한 제품을 출구 쪽에 놔다. 탈출하려고 해도 탈출구가 막혀 있었다는 것이다. 안전 교육도 전혀 없었다. 출근하자마자 머리 숙이고 일만 했었다.”

이처럼 기업과 정부로부터 쓰고 버리는 소모품 취급당하는 경험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참사를 자기 일처럼 여기며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있다.

기자는 6월 30일 이주민의 도시로 불리는 안산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어울림공원에 마련된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했다. 그 분향소는 지역의 이주민 지원 단체들과 중국 동포 단체들이 차렸다.

두툼한 분향소 방명록에는 서울에서 왔다고 작성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분노가 광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분향소를 지키고 있던 한 중국 동포는 친구의 딸이 이번 참사의 희생자라며 매우 비통해 했다. 2010년대 초에 한국에 와서 줄곧 한국에서만 살았다는 그는, 체류자격의 불안정 때문에 중국 동포들이 열악한 조건을 감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영주권자인지, 재외동포 비자인지, 방문취업 비자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요. 후자로 갈수록 좋은 일자리에서는 안 뽑으려 합니다. 비교적 안

정적이라는 재외동포 비자도 3년마다 연장해야 해서, 비자 연장에 불이익이 생길까 봐 뭉든 조심하게 됩니다.

“안산에서도 화성으로 인력회사를 통해 일용직으로 일하러 많이 다닙니다. 일할 곳이 어떤 위험이 있는 곳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니 까 중국 동포들이 위험한 곳에서 많이 일하는 거예요.”

관할 파출소는 분향소 설치를 막으려 했다. 파출소장이 “분향소는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는 막말을 해 항의를 받은 뒤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의 파장을 우려해 일단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찰 간부가 본심을 말한 것이다.

분향소가 차려진 다문화어울림공원은 6월 9일 다양한 이주민 600명이 참가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열린 곳이기도 하다. 이런 점 때문에 경찰은 분향소가 이주노동자들의 불만이 모이는 초점이 될까 봐 예민하게 굴었던 듯하다.

안산 분향소는 6월 30일까지 운영됐다. 그 뒤 서울의 중국 동포 밀집 지역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한다.

다인종 노동계급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인은 2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퍼센트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에서 외국인, 이민 2세, 귀화자 등이 5퍼센트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데 이에 근접한 것이다.

이는 한국 노동계급이 다인종이 됐음을 보여 준다.

이번 참사는 상당수 이주민들이 내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일자리에서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비극적으로 드러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인 노동자보다 더 높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한국 전체 산재 사망자(812명) 중 외국인 노동자가 약 10퍼센트(85명)를 차지했다. 산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비



“웃는 모습도 못 보고” 7월 1일 화성시청 분향소 앞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오열하는 유가족

율의 3배 이상이다. 올해 1분기 외국인 산재 사망자 비율은 11퍼센트로 더 올랐다.(213명 중 24명)

윤석열 정부와 일부 기업주들은 노동력 부족으로 이주민 유입을 늘리면서도 이들의 안전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예컨대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는 30여 개국 출신의 이주노동자 약 1만 명이 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 따르면 통역사가 주요 6개국 2명씩만 배치돼 있어 위험한 작업을 할 때나 부상당했을 때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또 위험 표지판은 한국어로만 돼 있으며, 한 달에 두 번 영상으로 이뤄지는 안전 교육도 한국어로만 제공된다고 한다.

산재 위험에 맞서고 이주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할 기층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적 개선이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해지기 십상이다. 이번 참사 석 달 전 화성 소방서가 아리셀 공장의 인명 피해 우려를 경고했음에도 아무 조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 이를 보여 준다.

그런데 정부가 이주민 유입을 늘리자 노동운동과 좌파의 일부는 한국인 고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동포들이 많이 일하는 건설업을 비롯해 외국인 가사노동자 등 여러 서비스 업종이나 건설플랜트, 조선 업종에서 그런 잘못된 태도가 적잖이 존재한다. 이주민의 국내 취업을 반대하면 이주민은 한국 노동운동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유가족 참석 추모제 방해한 민주당 소속 화성시장 정명근

화성시가 7월 1일 화성시청 앞에서 열린 첫 추모제를 방해했다. 화성시 공무원들이 유가족들에게 전화해 문화제가 취소됐다고 거짓말했고, 대책위가 예정대로 추모제를 진행하자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기도 했다.

화성시장 정명근은 민주당 소속

이다. 민주당은 정명근, 경기도지사 김동연, 민주당 실세이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등이 모두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정부에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더니, 정작 그것을 위해 유가족들이 행동에 나서자 막으려 하는 것이다.

유가족이 항의에 나서다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은 유가족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현재 희생자 19명의 유가족이 참여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는 정부의 중대재해 참사 진상규명 조사단에 유족 추천 전문위원 참여, 회사의 피해자 대책 즉시 마련 및 개인 접촉 금지 등 9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김태운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진실한 대안에 대해 논의할 테이블을 만들기 전까지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를 치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11억 원이 넘는 연봉을 챙긴 박순관은 반인권·반노동 행태로 악명 높은 대형 로펌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이윤을 위해 안전 규제 완화하는 윤석열 정부

아리셀 공장이 생산하던 것과 같은 리튬 배터리와 그 생산 과정의 안전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산학기술학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육군에서만 95건의 리튬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있었다. 2019년 세종시 육군 보급창고 화재가 대표적이다. 참사가 난 아리셀 공장이 바로 군납용 리튬 배터리를 생산하던 곳이다.

금속노조와 삼성전자노조 등이 올해 3월 발표한 <삼성전자 계열사 노동 안전보건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리튬 배터리(2차전지)를 생산하는 삼성SDI 노동자 3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20명이 “사고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고로 대피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1명 있었다.

정부는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려고 관련 기업 지원에는 열을 올리면서, 안전 조치를 감시하고 정비하는 일은 안중에도 없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는 2차전지(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공장에

아리셀 경영진 등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노총 등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유가족협의회를 지원하고 있다. 7월 1일 대책위는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화성시청 앞에서 첫 시민 추모제를 열었다. 그리고 분향소를 찾은 사람들이 유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추모의 벽’도 설치했다. 이 자리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도 참석했다.

대책위는 매일 저녁 7시 화성시청 앞에서 추모제를 열겠다고 밝혔다. 적잖은 이주노동자들이 이번 참사와 같은 일이 자신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고 여기는 만큼, 이주노동자들이 참가하기 용이한 일요일 같은 날에 항의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필요 이상의 과도한 안전 기준이 적용돼 공장 건설이 지연되거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일부 안전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이용해 참사 한 달 전 중소기업중앙회는 화학물질 취급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적극 청원했고, 정부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파견 확대

정부는 세계적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는 이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려고 안전을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알량한 중대재해 처벌법도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 완화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6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은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이번 참사의 원인이 불법 파견에 있다는 질의에,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법제화해 사실상 파견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여전히 노동자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에 대한 경찰 소환을 규탄한다

최영준·김지윤·박이랑 등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7월 4일 종로경찰서에 출석 조사를 받는다. 이 3인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8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열린 팔연사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고 있다. 미신고 집회라는 것이다.

경찰은 겉핥기만 구호 제창이나 팻말 등을 꼬투리 잡아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라며 수사한다. 그리고 법원은 “구호 제창 등이 당시 취재를 온 기자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전달됐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처벌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기자회견 문 낭독뿐 아니라 팻말 들기, 구호 제창 등이 필요하다. 이는 기본적인 언론·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더욱이 경찰이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수사하는 잣대는 자의적이다. 대부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기자회견이 미신고 집회로 규정된다.

이렇듯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소환하는 것은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18일 기자회견은 세계적 공분을 촉발한 이스라엘의 알아흘리 병원 폭격을 규탄하는 자리

였다. 내외국인 수십 명이 긴급 공지를 보고 모여 이스라엘의 잔혹함과 가자지구 인종 학살을 규탄하고 그에 맞선 저항과 연대를 호소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8개월 넘게 가자지구 전역의 병원·학교·난민촌을 가리지 않고 폭격하고 지상군을 투입해 잔인한 인종 학살을 벌이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이스라엘 성토는 완전히 옳았다.

예의 주시

그런데 경찰은 반년도 더 지난 4월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마치 총선 끝나기를 기다렸다는듯이 팔연사의 활동에 태클을 걸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한국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경찰 등이 팔연사 집회를 사찰하다가 주최 측 인권감시단에게 제지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4월 말 국정원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안보 위협 요소’로 주시하고 있음을 밝힌 ‘테러’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다.

최영준·김지윤·박이랑 활동가에 대한 경찰의 소환을 규탄하며,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굳건하게 키워 나가자.

이재혁



저항·연대 표현의 자유 경찰이 문제 삼는 이스라엘의 알아흘리 병원 폭격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탄핵 국회 청원 13일 만에 100만 명 돌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광범한 불신을 보여 주다 탄핵 청원 외면하는 민주당

김문성

6월 말 언론은 온통 윤석열에게 불리한 보도로 장식됐다.

JTBC 뉴스는 해병대 제1사령관 임성근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유죄 판결)와 아는 사이였다는 의혹을 증거와 함께 보도했다.

윤석열이 임성근을 비호한 것이 이종호-김건희의 구명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보도다.

뒤이어,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이 불순 세력의 음모로 봤다는 증언이 전 국회의장 김진표에게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 자신은 이사가 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언론보도에서 재인용)

김진표는 최고위 경제관료 출신으로 대표적인 민주당 보수파다. 그런 그가 곧 발간될 회고록에서 이태원 참사 얼마 후 윤석열과의 독대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공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발언 내용을 부인했으나, 박홍근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독대 직후 당시 김진표에게 전해 듣고 메모한 윤석열 발언 내용을 공개했다.

“이태원은 먹거리(동남아 식당 조금)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감. MBC,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2~3일 전부터 사람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 내보낸 이유 의혹.”

윤석열은 극우의 음모론을 수용해 이태원 참사를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던 것이다.

이명박 측근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진수희는 또 다른 폭로를 했다. 윤석열이 당시 이상민 경질 건의 보고서를 보고는 “어떤 XX가 이거를 올렸어”라고 격노했다는 것이다.

채 해병 참사, 이태원 참사, 김건희 부패 의혹 등 윤석열의 약점인 사건들에 관한 새로운 의혹이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것이다.

고물가와 안보 위기도 윤석열의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북·러 군사동맹의 체결은 윤석열의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 노선에 기댄 “힘을 통한 평화”가 실패한 결과로 여겨지고 있다.

윤석열의 군국주의는 국내에선 애꿎은 사병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한반도 주변에선 안보 위기 심화로 돌아오고 있다.

촛불행동의 거리 집회 호소

윤석열을 격노케 했을 소식 또 하나는 윤석열 탄핵 국회 국민동의청원(온라인) 소식이었을 것이다. 정권 초부터 매주 윤석열 퇴진 집회를 진행해 온 촛불행동이 제안한 것이다.

탄핵 청원은 요건을 채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상정됐다. 애초 이 청원은 탄핵소추안의 국회 상정(5만 명 서명)이 목표였는데, 청원 개시 13일 만인 7월 3일 오전 100만 명을 넘길 듯하다.

지난 주말부터는 청원자가 늘면서 접수 분을 대기해야 청원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다.(촛불행동은 국회의장에게 서버 증설을 요구했다.)

촛불행동은 ▲해병대 참사 수사 외압 ▲윤석열-김건희 일가 부정비리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모두 개혁 염원, 평화 염원에 역행한 행위들이다.

촛불행동은 청원 취지에서 서민 생계가 파탄나고 있음도 강조했다. 윤석열의 긴축과 부자 감세 기조는 대중의 생계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국가기관 사이트에 실명으로 100만 명이 대통령을 사퇴시키자는 청원에 동의한 것은 (그것도 13일 만에) 반정부 정서가 광범위함을 보여 준다.

6월 이후 윤석열 국정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는 20퍼센트대로 고착되고 있고, 윤석열 탄핵 청원에 대한 최신 찬반 조사에서는 과반이 탄핵에 찬성했다.

촛불행동은 29일 퇴진 집회에서 탄핵 청원을 계기로 집회 규모를 늘리고 탄핵 청원도 최대한 조직하자고 호소했다. 국회 바깥에서 힘을 결집해 국회를 압박하자는 것이다.



의회 바깥에서 반정부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6월 15일 윤석열 퇴진 집회

민주당, 총선 때는 “해고” 말하더니 막상 탄핵 청원은 외면

민주당 · 조국혁신당 · 진보당 등은 채 해병 특검법을 늦어도 7월 4일에는 처리할 것이다.

윤석열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반정부 정서는 더 커질 것이다. 탄핵 청원에서 확인된 윤석열 퇴진 여론은 더 커질 테지만, 민주당은 회피할 것 같다.

총선 후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 등으로 윤석열을 압박함과 동시에 연금 개악 동참을 시사하는 등 화전양면 책략을 부리며 점진적으로 차기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택해 왔다.

지금 탄핵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에게 달렸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게 정치적 양극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는 탄핵 청원은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다. 민주당은 더한층의 정치 위기를 바라지 않는 지배계급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강유정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말하며 부담감을 털어냈다.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의제가 되기 때문에 ... 지금은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 의제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윤석열 심판 투표 덕에 압도적 1당이 됐고, 당시 이재

명 대표는 일을 잘 못하면 해고해야 한다며 탄핵 추진을 암시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야당들도 아직 적극적이지 않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청원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총선 때와 뉘앙스가 다른 것이다.

반면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요구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즉각적으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진보당은 그것을 압박할 행동 건설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미루면서, 국회 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자가 나오도록 명분을 만들고 중도층을 설득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것이다. 특검이 안 되면 국회 국정조사 등을 해서 윤석열의 혐의를 찾아내자는 식이다.

하지만 시간 낭비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 김건희의 도덕성을 믿어서 각종 특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자칫 윤석열의 정치 위기가 심화돼 노동계급의 정치 · 경제 투쟁을 고무할까 봐 두려워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민주당도 두려움을 갖고 있다.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리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⑨

선거는 변화의 수단인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선거나 의회를 통한 개혁으로 자본주의를 변혁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의회 내 좌파 의원들의 압력과, 거리와 작업장의 운동을 결합시켜서 근본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정한 권력이 의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진정한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자들, 가령 대기업, 은행, 금융기관 등의 이사와 국가 관료 기구(군대, 사법부, 경찰 등의 우두머리들)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의 선거 연합이 차기 대선에서 이긴다고 해도 한국 사회의 기본 궤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혁명가들이 의회가 아닌 투쟁을 더 중시하는 이유 중 하나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의회 제도에 목매기 보다는 그들 자신이 요구를 내걸고 싸우는 것이 혁명적 변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이라고 본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중 한 명인 블라디미르 레닌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대중 자신의 행동(예컨대, 큰 파업)이 의회 내 활동보다 언제나 더 중요하다. 단지 혁명기나 혁명적 위기 상황에서 뿐 아니라 모든 시기에 그렇다.”

그러나 레닌은 이런 점을 이해하는 것과,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의회를 아예 무시해도 좋다는 생각은 완전히 별개라고 지적했다. 의회 제도가 어떤 사회 변화 전략에서도 핵심적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의회에서 통과되는 법은 노동계급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런 법으로 사람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의회 표결은 더 광범한 쟁점에서 사람들의 분노의 초점이 될 수 있는데, 노동 악법이나 반민주 악법을 통과시키는 투표가 그렇다. 노동자들은 종종 그런 “의회적” 쟁점을 놓고 투쟁에 나선다.

그리고 총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하느냐가 투쟁이 벌어질 지형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심지어 주요 정당의 정책이 별반 다르지 않을 때조차 그럴 수 있다.

예컨대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종종 “대중이 너무 보수적”이라면서 노동자들이 저항에 나서기 어렵다거나 불가능하다는 두려움이 커진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민주당이 이기고 진보정당이 상당한 전진을 하면 사람들이 변화의 염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전투

이렇듯 선거는 (비록 많이 왜곡된 형태이지만) 노동계급 의식을 놓고 벌어지는 전투의 일부다.

수백만 명이 (그리고 대부분의 시기에는 노동계급의 대부분이) 의회의 구실에 대해 환상을 품고 있다. 혁명가들이 의회를 그저 무시해서는 그런 환상이 저절로 깨지지 않는다.

총선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갖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총선은 주변 이웃이나 학교·일터에서 동료들과 정치 얘기를 나눌 허가증 같은 구실을 한다. 혁명가들은 이런 논쟁에 개입해 이 체제에 대해 그리고 선거의 한계에 대해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라는 대안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투쟁에 이끌릴 수 있는 대중과 관계를 맺을 기회를 얻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때로는 혁명가들이 자체의 지지 기반이 있다면 선거를 이용해 그들 자신이 입후보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지방 의원이나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레닌의 표현을 빌리자면 “민중의 호민관” 구실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계급 문제를 가능한 한 침묵하게 제기하는 쟁점을 던지고 다른 정당들이 가짜임을 들춰내야 한다.

그러나 좌파적 개혁주의 의원과 혁명적 사회주의자 의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좌파적 개혁주의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를 통해 사회를 바꾸는 것이다. 그 탓에, 성공을 위해서는 투쟁이 아니라 선거 활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강화하는 데에 일조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근본적 변화를 이룰 힘이 의회나 대통령 권좌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에 혁명가들은 의회에 앉아 있는 매시간 의회의 한계를 드러내고 의회의 몰락을 위해서 일한다. 의원이 된 혁명가는 매 순간 자신의 의원 지위를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운동이든, 예컨대 지금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탄핵 운동이 선거 승리를 목표로 삼게 되면 길들여질 위험에 빠지고 만다.

승리의 길은 최대한 많은 의원을 배출하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거리와 일터에서 투쟁을 건설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어떤 좌파적 운동이든 가장 급진적인 결론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 글은 본지의 기본 입장을 해설하는 기획 연재의 아홉 번째 글이다. 다음 연재에서는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다룰 것이다.

대한민국국회
국민동의청원현재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

접속 순서가 되면 자동으로 접속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접속 후 이용을 완료하신 경우에는
다른 접속 대기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 창을 닫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 대기시간은 실제 대기시간과 다를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기인원
27382명

예상 대기시간
3시간 48분 11초

국회 웹사이트의 서버 부실과 방치로 윤석열 탄핵 청원 동의 서명을 못 하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면 거리의 퇴진 운동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즉각 퇴진 요구 시위 때도 시위 참가자가 4주 연속 100만 명을 넘기고 급기야 200만 명을 넘겨서야 비로소 박근혜 탄핵에 나섰다. 그 사이 영수회담 비밀 제안 등 탄핵을 피하려고 그들은 갖은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언제까지 정치적 위기의 피해자로만 머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위기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고 반대파를 약화시키려 애쓸 것이다.

특히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전쟁 위협을 과장해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려 애쓸 것이다.

지금 탄핵 청원에서 확인된 광범한 불만과 분노를 대변하며 의회 바깥에서 저항을 키워야 한다. 기층에서, 개방적으로 대중을 동원하고 단호하고 대담하게 행동해야 한다.

함께 참가합시다!

윤석열 탄핵 소추
“국민동의청원”
참여 링크 (7월 20일 까지)
bitly/윤석열을탄핵하라





삼성전자노조, 파업 선언

노동자들은 회사 위기에 책임 없다. 임금 인상 요구 정당하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7월 8~10일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손우목 삼성전자노조 위원장은 7월 1일 저녁 노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2만 80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집행부에게 총파업의 명을 내렸고 총파업을 통해 이 모든 책임을 사측에 묻는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직후인 4월 17일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노조 인정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창사 55년 만에 첫 집단행동에 나섰다. 6월 7일엔 첫 파업(하루 집단 연차 사용)을 벌였다.

이후 사용자 측의 제안으로 노사는 중앙노동위 사후 조정에 임했다. 사후 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이다. 노사는 6월 27일까지 3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고, 28일 오후 노조 웹사이트를 통해 중앙노동위의 조정 결과가 공유됐다.

이를 접한 많은 노동자들이 불만을 강하게 제기했다. 노조의 요구는 거의 수용되지 않은 반면, 사용자 측 제시안은 대부분 관철됐기 때문이다.

사용자 측은 노동자들이 요구한(노사협의회 결정 수준 이상의) 임금 인상과 성과급 개선 요구를 일절 거부했다. 심지어 2023년 임금 교섭을 2024년과 병합해 진행하는 조건으로, 유급휴가를 하루 늘리기로 한 약속조차 간단히 뒤집었다.

반도체 경쟁

조정안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용자 측의 제시안도 포함했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한다."

노동자들에게 계속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회사의 "경쟁력 제고"(인건비 절약을 통한 투자비 확보)에 군말 없이 따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위



임원진은 인센티브 수억 원, 노동자는 성과급 제로 당차게 파업을 준비 중인 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

기는 노동자 탓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심화된 결과다(관련 기사: 본지 508호, '경쟁 심화와 거품 우려로 불확실성 커지는 반도체 산업').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시장 주도권을 빼앗긴 것도 경영 실패 탓이지 노동자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용자 측은 지난해 반도체 부문 적자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성과급을 전액 삭감했다. 물가 폭등 상황에서 전체 연봉의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성과급을 전액 삭감한 것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생계비 고통을 가했다. 고임금 노동자의 이기적인 파업이라는 것도 가당치 않다.

적자라지만 한국 최대 기업 삼성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억제된 반면 삼성전자 임원들은 수억 원씩 인센티브를 받고 퇴직금도 넉넉하게 챙겨갔다. 이재용은 지난해 배당금 총액이 6.4퍼센트 늘어난 3244억 원을 받았다.

실적이 개선되면 보상이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 올해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 영업이익이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용자 측은 올해 성과급도 기대하지 말라고 공언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무노조 경영' 삼성이 전

혀 변하지 않았다며 사용자 측을 맹성토했다. 사용자 측 제시안대로 나올 거면 "사후 조정은 왜 한 거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노조 게시판에는 조정안을 거부하는 의견이 쏟아졌고, 사용자 측을 제대로 압박하려면 실질적인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이 올라왔다.

거부

노조 집행부는 조정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 필요 여부'를 묻는 설문을 6월 29일부터 7월 1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투쟁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설문에 참가한 조합원 중 다수가 찬반을 물을 것도 없다고 답했고 이어서 손우목 노조 위원장이 전면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전 조합원은 7월 8~10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사업장 앞에 집결하라는 파업 지침이 내려졌다.

그간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하며 꾸준히 보도해 온 본지는 삼성전자노조의 파업 돌입 선언을 전폭 지지한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요구는 완전 정당하다.

한국 경제의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 노

동자들의 투쟁은 다른 노동자들의 사기와 자신감을 북돋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삼성의 많은 계열사들과 그 외 협력사들은 삼성전자의 임금 인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모든 계열사와 협력사들에게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손우목 삼성전자노조 위원장)

물가 폭등으로 생계비 위기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최근 정부와 사용자들을 향해 임금 인상 투쟁에 나서고 있다.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주요 요구로 내세운 6월 22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3만 명이 모였고, 7월 6일엔 공무원·교사 노동자들도 정부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인다.

삼성전자노조 투쟁은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반도체 노동조합과 인디애나주 금속분말제품 노동자연합, 미국전기통신노조 83700지부, 대만 타오위안시(市)노총이 투쟁 지지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위기를 활용해 파업에 나서 사용자 측에 한 방을 날리길 진심으로 바란다.

본지 독자들도 삼성전자 노동자 파업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자.

신정환